

[단독] 한국 고용노동부 장관, 테크기업들에 AI 초과이익을 협력사, 직원과 공유하라고 당부

한국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내 주요 기술기업들이 AI 붐에 따른 대규모 초과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례 없는 반도체 부문의 이익 증가가 불평등 격차를 더 키울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이익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세금을 제외한 초과 이익을 협력사, 하청업체, 그리고 그 노동자들과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기업 성장에 기여해온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 기업, 노동조합, 협력업체가 이러한 “초과이익”을 어떻게 나누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일지에 대해 공개적인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으며, 최근 삼성전자와 노조 간 막판 임금협상을 중재해 대규모 파업을 피하고 메모리 반도체 부문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보너스를 지급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삼성 합의 이후 외신과 가진 첫 인터뷰에서 나온 김 장관의 분배 제안은, 한국이 글로벌 AI 붐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을 어떻게 다룰지를 놓고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이례적인 아이디어들을 보여준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분배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삼성의 놀라운 성과가 노사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1,700개 협력업체가 있고, 물과 전기 공급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기여도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은 AI 활용 확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급증했다. 삼성전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을 경우 직원들에게 특별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말 처음으로 초과이익 처리 방안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후 관련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과이익이 무엇인지, 또 이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구상—예컨대 협력업체 납품단가 조정 등—을 로이터에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의 제안은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그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국가개입” 아이디어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으나, 앞서 김 장관의 발언이 한국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고 논의 필요성을 환영한 바 있다. 또 한국의 한 고위 정책결정자는 지난달 AI 이익에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도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논평을 거부했다.

김 장관 “공산주의가 아니라 재투자”

김 장관은 자신의 제안이 “공산주의”에 해당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는 공급망에 대한 재투자이자 경쟁력 강화 방안이며, 한국이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말하는 분배는 협력업체와 이익을 나누자는 것”이라며, “이는 분명히 재투자”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협력업체 납품단가 조정이 논의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이익이 중소 협력업체의 인재 육성에 투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구직자들은 임금 격차와 복지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삼성 같은 대기업을 선호하는데, AI 붐에 따른 대기업 노동자들의 거액 성과급 지급이 이러한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하위 20% 가구와 상위 20% 가구 간 소득 격차는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확대됐다.

그는 불평등 심화가 아시아 4위 경제국인 한국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삼성 파업 모면

한국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과 노조 간 협상에 개입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의 요청에 따라 개입했다고 밝혔다. 협상이 반복적으로 결렬되면서 18일간의 파업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는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해온 만큼 사측과 노조 모두 이런 협상 경험이 부족했으며, 전례 없는 이익을 회사 내부의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할지도 어려운 과제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노동운동의 중진으로서 쌓아온 배경을 활용해 이들과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삼성의 이번 합의가 더 나은 보상을 요구하는 다른 기업 노조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분석해왔다.

김 장관은 모든 협상에 개입하고 싶지는 않다며, 향후 노사 협상을 지원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김 장관은 삼성 경영진이 메모리 반도체 부문과 비메모리 부문 간 보상 격차에 따른 내부 불만을 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부 파운드리 인력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회사는 중장기적으로 전략 인재에 투자하고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